

정책결정과정에서 과학을 아는 사람 있어야...

글 | 이은정 _ KBS 과학전문기자 ejlee@kbs.co.kr

#1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조직 개편이 도마에 올랐을 때 과학계는 긴장했다. 매년 정부 조직 통폐합때마다 문제가 되던 과학기술처를 정보통신부 혹은 산업자원부에 통합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점점 산업자원부로 통합된다는 게 대세가 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부 조직 개편 전날 강창희 과기부 장관이 과기부 폐지에 목숨(?) 걸고 반대했다. 강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가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인데다 본인이 장관으로 있을 때 부처를 폐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합으로 정권을 잡았고, 자민련의 무게 있는 정치인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오히려 승격됐다.

#2 지난 연말 수능 물리2 시험 문제의 정답이 틀렸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다. 언론에서 최초로 오답 논란을 문제 제기했을 때나 물리학회가 해당 문제의 정답을 2개로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을 때 교육 당국(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은 똑같았다. 다원자 이상기체는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단원자 이상기체라고만 추정해야 하며 그래서 원래 평가원의 답이 맞다는 것이다. 언론과 여론의 질타 속에 사흘간 기존 입장을 고수하던 평가원의 기류가 갑자기 변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정답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오후에 긴급 기자 회견을 열더니 복수 정답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평가원장이 사퇴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게 된 배경에는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의 판단이 주효했다. 그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교육자로, 이상기체 운운하는 논란

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정답이 바뀌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과학기술 중시하겠다”는 당선자 철학은 어디에?

위의 두 가지 사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인수위는 과학기술부의 일부(연구개발특구와 기초과학을 제외한 국가 R&D정책)를 지식경제부에 넘겨주고 나머지를 교육부와 합쳐 교육과학부로 만들겠다는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당초 구상했던 “교육부를 약화시키고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합쳐 인재과학부를



전직 과학기술부 장관들이 1월 25일 국회를 방문,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학제(7대), 김기형(1대), 채영복(22대), 김시중(14대), 권숙일(18대)

만들겠다”는 안과는 구심점이 완전 달라졌다. 이명박 캠프의 3대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를 차지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은 인수위에서 논의가 되는 건지, 아닌지 흘러나오는 얘기도 별로 없다.

분명히 대선 과정에서만 해도 “과학기술을 중시하겠다”는 당선자의 철학은 어디 갔을까. 선대위 공동위원장에 박찬모 전 포항공대 총장과 배은희 리젠바이오텍 사장을 임명했고, 민동필 서울대 교수도 TFT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준승 이화여대 교수나 오세정 서울대 교수도 이명박 당선인과 친하다고 하는데 왜 과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과기부 폐지는 인수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을까.

이 해답을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국민의 정부 때 과기부가 살아남은 일이나 수능 물리 문제의 정답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지션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었고, 이를 관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학계 한 목소리에 대답 없는 인수위, 그 이유는?

그런데 현재 인수위원회의 운영을 보자. 한나라당에서 일찍부터 정부 부처 조정안을 냈던 이주호 의원의 초안에는 과학기술부가 교육부를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인수위가 처음에 부처 통폐합 아이디어를 낼 때도 마찬가지였다. 교육부의 초등, 중등 기능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대학 교육을 과학기술과 합친다는 것이었다. 산업자원부도 중소기업부로 재편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것이 인수위의 실무 과정을 거치면서 과기부가 쪼개지고 산자부가 지식경제부로 오히려 확대됐다. 원인은 인수위 내 정부혁신규제개혁TFT팀에 과학에 대한 중심을 갖고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산자부는 모 국장이 파견돼 조직 개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과기부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산자부 파견 국장에 의해 당초 거론되지 않았던 핵융합연구개발법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고 원자력정책과 연구 개발 업무 또한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기로 결정됐다.

초기 예상과 달리 과기부가 쪼개지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의 많은 부분이 산자부로 넘어가게 되자 과학계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평소 과학기술 분야를 이해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접촉을 시도했으나 “글쎄,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라는 말을 듣는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일단 당론으로 정해진 일에 대해, 4월 공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의원이 이명박 당선인의 심기를



한국과학기술단체연합회 등 과학기술단체와 이상민 국회의원 등은 대덕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기부, 정통부 폐지 방침 철회' 등을 촉구했다 (2008년 1월 22일, 사진제공=연합뉴스).

거스르는 의견을 주장하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 의원 본인도 과학과 기술을 분리하는 개편안에 반대하지만 ‘박근혜 사람’으로 분류된 현실에서 정치적인 공격으로 비칠까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 과기부와 교육부의 통합 아이디어를 냈던 이주호 의원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 의원이 인수위의 사회교육문화분과로, 정부혁신규제개혁TFT팀에는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긴 자신이 소속된 분과의 일만 하더라도 지금 코피가 터질 형국인데 남의 분과에 감나라 배나라 할 여유도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처음의 논의로 돌아오면 수백명의 전문가가 한마디씩 하는 것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 정확하게 과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의 존재 기반이 과학에 기인하면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과학계는 전직 과기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하고 8개 학회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과실연, 과기노조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과연 인수위의 결정을 뒤엎을 수 있을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학계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야하며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인재가 정부 조직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 ㉔



글쓰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의대에서 박사학위(생명윤리)를 받았다. 1995년 언론계에 입문 후 경향신문에서 10여 년 간 과학분야를 담당했다.